보 도 자 료

배포 날짜	2026. 6. 19. (금)	총 3페이지

2026년 6월 19일 충북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릴레이 성명발표 4

구 분	보도요청			
수 신	각 언론사 여성·아동 담당			
발 신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담 당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팀장 한다솜** www.teen-up.com / 02) 6348-1318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7층			
릴레이 성명발표 담당	센터명	**충북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총 3장
	담당자	**정선희 센터장**	연락처	**043-224-8297**

'엑스(X)'의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조정을 환영한다.

충북 성착취 피해 아동 · 청소년 지원센터 성 명 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유해 콘텐츠 차단 의무를 강화하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인력을 확충하라"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성범죄 사건 중 성매수 사건의 81.3%, 성착취물 제작 사건의 66.5%가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했다. (여성신문. 2024.04.22.) 성착취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익명성을 보장받아 안전하게 성착취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충북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이하 충북아청센터)는 온라인상에서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아웃리치(Cyber Outreach)'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렇기에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공간에서 성착취물과 불법 유해 정보로 인하여 얼마나 무

방비하게 피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피해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 애플리케이션 마켓 내 대표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구 트위터)'의 연령 등급이 현재부터라도 '청소년 이용 불가'로 조정되는 조치가 나왔기에 이를 적극 환영한다. (2026년 6월 10일 한국일보 인용) 정확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지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의 범람 및 AI 등을 활용한 음란물 확산에 따라 '청소년 이용 불가'로 전격 변경된 조치로 본다. 그러나 단순히 이용 등급을 제한하는 것은 약간의 제스처에 불과하다.

'엑스(X·구 트위터)'를 이미 사용하는 아동·청소년 사용자를 특별히 규제할 수 없으며, 향후 플랫폼의 미성년자 이용 제한 등 단편적인 조치만으로는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되는 성착취 구조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충북아청센터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며 발견한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해 신고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찾아 어렵게 삭제하더라도, '복사 후 붙여넣기(복붙)' 방식으로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악순환이 반복됨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다.

그렇기에 근원적으로 플랫폼 내에서 아동·청소년을 타깃으로 하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와 불법 성착취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기술 조치가 즉각 실행되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구글, 애플, 틱톡, 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정부가 적극 규제하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호주와 영국은 자국 국내법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유해 콘텐츠를 차단해 안전하고 투명하며 믿을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구축할 책임을 부과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해 실행했던 실효성 있는 규제는 무엇이 있었나?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은 무책임함이 성범죄를 키워왔고 확산시킨 것은 아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계 부처는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실효성 있는 규제와 예방 대책을 마련해 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현재의 제도가 급속히 변화하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충분히 억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점검이 시급하다.

전국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들의 현장 수작업 모니터링에 의존하는 아날로그식 대응을 넘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술적 개입을 전면 요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기에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전문 인력의 확충이 근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43만 명의 아동·청소년이 생활하는 충북에서 성착취 피해 예방과 발굴, 구조, 상담, 회복 등의 통합적 피해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단 3명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 및 지원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은 심리·정서적 공황, 학업 중단, 가정 내 갈등, 경제적 결핍, 주거 불안정 등 복합적인 위기를 동시에 경험하므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밀착 관리가 필수적이다. 긴급 구조, 현장 상담, 의료·법률지원 연계, 자립·자활 지원, 지속적인 사례관리,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피해 아동·청소년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전 과정을 현장 활동가들이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다. 현장의 인력 부족은 상담원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어 심리적 소진을 가중시키며, 전문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전문 상담원의 잦은 이직은 아동·청소년과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상담 및 회복 서비스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의 지리적 여건은 현장의 고충을 더욱 심화시킨다. 충북은 청주를 포함한 3개 시와 단양, 영동, 보은, 옥천, 괴산 등 다수의 군 단위 농촌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간 이동 거리가 매우 길고 교통 접근성이 낮다.

원거리 지역에서 긴급 개입이나 현장 지원 요청이 발생할 경우, 단 3명의 인력으로는 신속한 대응에 물리적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보호·예방하고 피해 지원을 통해 회복하도록 돕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에 충북아청센터는 160만 충북도민과 함께,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엑스(X)'의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조정을 기점으로,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아동·청소년을 겨냥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및 성착취물 유통을 원천 차단하도록 법적·기술적 의무와 보호책임을 강제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대한민국의 고도화된 AI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불법 성착취물을 실시간 탐지·추적·차단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AI 기반 사이버 범죄 대응 시스템'을 즉각 구축하라!

하나,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급격한 저연령화 및 디지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예산을 대폭 확보하라!

하나, 지역 간 현장 지원 공백 해소 및 촘촘한 현장에 대한 신속 개입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현재 3명에 불과한 전문 상담 인력을 최소 5명 이상으로 즉각 확충하라!

하나, 복붙으로 재생산되는 디지털 범죄와 복합위기 아동·청소년의 돌봄·주거·의료·심리 지원을 포괄하는 '통합적 보호 및 예방·장기 회복 지원체계'로 전면 확대하라

2026. 6. 19.

사) 충북여성인권 부설 충북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해봄